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생활변화

남근우

1. 새마을운동과 未發의 ‘현재학’

전후의 한국민속학사에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보다 더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추진한 이 근대화 프로젝트는 농촌사회의 구조변동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상을 영위해온 농민들의 생활세계에도 다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간 민속의 전승모체로 시골의 마을을 중시해온 민속학자들에게 있어, 그 조사 현장의 구조변동과 생활변화는 민속학의 존립과 실천을 다시 물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었을 것이다. 1972년 한국의 민속학회가 ‘제1회 민속학 전국대회’를 주최하여, 「민속학의 역할」과 「문화재의 보존과 전수」를 주제로 열띤 토론회를 펼친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 당시 민속학회장으로 사회를 맡은 임동권은 그 배경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근대화작업이 한창이고 그러한 와중에 오랜 전통 속에 전승되어온 민속자료들이 인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시점에서 민속자료의 보존은 매우 위급한 상태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민속학회로서도 무슨 발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토론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정리해서 학회의 의견으로서 문화재정책의 행정자료로 참고토록 제출할 예정입니다.(민속학회 편, 1972: 106. 인용문 안의 []은 필자의 주, 밑줄 역시 필자, 이하 같음.)

밑줄부분에 보이는 ‘민속자료의 의도적 파괴’란, 박정희 정권이 미신타파를 명분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장승과 서낭당 등을 강압적으로 훼손, 철거한 것을 말한다. 60년대 말의 ‘신생활운동’과 70년대 초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자행된 일로,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빈발하자 급기야 내무부는 ‘장승 보호령’을 발표하고 장승의 특별보호 지시를 내린다. (자료1, 2) 또 서낭당의 경우도 “민족적 단결을 촉진하는 민속으로 발전시켜 국민총화의 중추로 삼아야 한다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국이] 신중한 검토”(『동아일보』, 1972년 5월 6일)를 하게 되는데, 이미 서낭당과 같은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은 “전국에서 3분의 2 정도가 파괴”(최길성, 1974: 40)된 상황이었다.



장승·서낭당 보호령

자료1(左): 「장승」 보호령(『조선일보』 1972년 4월 28일)
 자료2(右): 「장승·서낭당 보호령」(『동아일보』 1972년 5월 6일)

이처럼 ‘민속자료의 보존[이] 매우 위급한 상태’에서 「민속학의 역할」을 긴급히 논의해보자는 게 위 토론회의 취지다. 요컨대 민속의 가치와 의의 등을 재음미, 제고함으로써 그 구제의 필요성과 보존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그러한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문화재정책의 행정자료로 참고토록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 취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동 토론회에서는 기층의 민족문화론에 기초한 민속의 구제·보존론이 대세를 이룬다. 다만 황폐강과 김태곤만이 그러한 구제(salvage) ‘민속학의 역할’ 제시에 이견을 보이는데, 여기서 잠시 후자의 발언을 한 대목 들어보자.

민속이 인멸된다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다. 인멸 대신에 민속은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까지도 대상으로 할 때에 민속학의 분야는 현재의 학으로서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넓은 토대를 갖지 않을까, ... 민속학이 해야 할 일은 민중의 생활 그 자체, 민중을 둘러싸고 있는 입체적인 생활 모드를 지[칭]하는 문화, 이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학은 우선 과거의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 내지는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용기를 가져야 하겠고 ... 민중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가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민속학회 편, 1972: 109~110)

밑줄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속학은, 이른바 ‘인멸’의 내러티브와 과거의 잔존문화 연구에서 ‘민중의 생활 그 자체’를 탐구하는 ‘현재학’으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김태곤의 주장은 70년대 전반 한국민속학의 방법론을 둘러싼 일련의 학술회의에서도 되풀이된다.² 그 학사적 의의에 대해서는拙藁(남근우, 2003)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가 강조한 ‘현재학’의 구현 여부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內觀的(emic) 접근을 통한 민중의 실생활 탐구라는 방법론의 전환 촉구가 무색하게도, 當節의 한국민속학은 새마을운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마을 공동체와 그 성원들의 ‘현실적인’ 삶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 문제의 장승제나 서낭당 제사 혹은 무속신앙 등을 ‘민속문화제’나 ‘전통문화’로 본질화하여, 근대에 대항하는 내셔널리즘의 교두보로서 그 원형적 민족문화의 수집과 보존에 힘을 기울였을 뿐, 바로 눈앞의 ‘새마을’ 만들기과 그에 따른 일상의 생활변화에는 모두 눈을 감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농촌의 생활자들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급격한 사회변동 과정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강압적인 국가동원체제로 말미암아 농촌사회의 권력과 사회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또 그곳 주민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업, 의례, 관행 등의 일상의 ‘입체적 생활’이 어떻게 변모해 갔는지? 이에 대한 물음이나 연구실천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민속학은 농촌사회의 근대

화 과정을 미시적으로 천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었다. 한국민속학이 맞이한 작금의 위기는 실은 이 ‘주체 없는 민속 연구’가 자초한 부분이 작지 않다고 보인다.(남근우, 2013: 195~199) 늦게나마 그 未發의 ‘현재학’을 지향하는 새마을운동의 연구실천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일상과 생활 영역을 고찰한 최근의 연구, 구체적으로 역사학의 민중사나 일상사 연구, 그리고 일상생활의 사회학 등에서 추구한 새로운 성과를 몇 가지 거론해보겠다. 그것들은 새마을운동이라는 일상의 동원과 생활의 지배에 대해 마을의 생활자들이 피한 다양한 반응과 저항을 대상화하고 있어, 민속학의 일상연구에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 일본과 중국 독자들의 이해에 편의를 꾀하기 위해 먼저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전개를 간단히 개관하겠다. 이어, 그 역점사업이었던 농촌의 주택개량과 ‘통일벼’ 증산, ‘가정의례준칙’의 시행 및 그것들에 따른 생활변화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 삼자를 바탕으로, 결론을 같음하여 민속학적 일상연구의 가능성을 생각해보겠다.

2. 새마을운동의 배경과 전개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기치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저돌적으로 추진했다. 이 공업입국의 불균형성장 전략은 필연적으로 농촌의 소외와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농민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커지면서 60년대 후반 ‘이촌향도’의 탈농이 급증했고, 당연히 기왕의 ‘여촌야도’ 투표성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71년의 총선거 결과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집권 여당의 공화당에 대해 농촌지역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바로 직전의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의 대야진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로서는 여당의 득표율 급락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위기인식은 이듬해인 1972년 ‘10월 유신’의 단행이라는 초헌법적 비상조치와 독재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도시의 지식인과 야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세력의 저항에 직면하자,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거나 그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저항세력을 약화시켜, 장기집권의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박진도·한도현, 1999: 43~46).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필요에 의해 펼쳐진바, 그것은 농촌을 강력한 정치적 보루로 재건하여 도시의 저항세력을 포위하기 위한(고원, 2006a: 186~187) 농촌사회개발이자 헤게모니적 통치 전략이었다.



사진1(左):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 1리 입구에 있는 신거 역과 광장의 박정희 동상(1969년 8월 4일 경상남도 수해지역 시찰을 위해 전용열차로 경부선을 지나다, 깨끗한 마을의 모습과 제방 복구에 맘 홀리는 주민들을 보고 이 역에 멈춰섰다고 한다. 역사 오른쪽에 당시 박정희 일행이 탔던 열차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2017년 10월 촬영)

사진2(右): 신거 驛舍의 내부(이듬해 4월 22일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경북 청도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같은 농촌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전국 농촌이 신도 1리 만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새마을운동을 제창했다고 보인다. 2017년 10월 촬영)

새마을운동의 출발은 농촌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찾는 게 일반적이다. 이 사업은 1970년 4월 한해 대책을 위한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 무렵 공화당 재정위원장이자 쌍룡시멘트 대표였던 김성근이 시멘트 업계의 불황을 들먹이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자, 박정희는 그 과잉재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환병, 2012: 98~101). 그해 가을 내무부는 약 3만 5천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행정마을에 시멘트 335포대씩을 무상으로 배포했다. 단, 이 시멘트를 개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을의 공동사업을 일으키는 데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그 예시로 마을로 들어오는 길 넓히기, 마을 앞의 작은 하천 정비하기, 공동우물 만들기, 공동빨래터 만들기과 같은 10대 사업내역을 들면서, 그중에서 마을 실정에 맞는 것을 선별, 추진하도록 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겼다.

그런데 위의 10대 사업은 그 대부분이 평소 농촌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약 1만 6천개의 마을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 이에 내무부는 제2차년도의 사업으로 이듬해 그 '우수 마을'들에 한해, 추가적으로 시멘트 5백 포대와 철근 1톤씩을 '기본자재'로 각 마을에 제공했다. 나아가 마을의 환경개선에 국한되었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와 함께 농민의 정신계발을 포괄하는 '새마을운동'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72년 그 추진기구로 내무부장관과 관련부처의 차관들로 구성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설치되었다. 그 밑에 각 도, 시·군, 면 단위에서도 도지사와 군수, 면장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추진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각 마을에는 마을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마을지도자를 도왔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은 중앙에서 지방행정을 거쳐 말단의 마을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위계적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시에 전국의 모든 마을을 주민의 참여도와 사업실적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3분류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책과 승급제도를 통해 마을간 경쟁을 유도했다. 박정희 정권은 최종적으로 모든 마을을 '자립마을'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 아래, 1971년부터 73년까지를 기반조성단계, 74~76년의 생산기반시설 확충단계, 그리고 77~81년의 소득기반완비단계를 설정하고,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의 전국민화와 전국 촌락의 '자립마을'화를 추진했다.(새마을연구회 편, 1980: 205~237)



사진3: 신도 1리의 새마을운동 테마 파크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2017년 10월 촬영)



사진4: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 2층에 걸린 박정희의 휘호 「근면 자조 협동」(2017년 10월 촬영)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처음에는 농촌사회의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1972년 10월 유신체제의 성립과 함께 농촌사회개발운동에서 정치적 국민운동으로 점차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듬해 11월 제1차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박정희가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그것을 웅변한다. 즉, '새마을운동이 10월 유신이고, 10월 유신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선언이다. 결국 새마을운동은 관 주도의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 까닭에, 사업이 단행될수록

초기의 활력은 사라졌고, 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사업의 강압적 추진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져갔다. 그리고 1979년 10월 박정희의 사망에 따른 유신체제의 종언과 함께 새마을운동은 급격히 그 동력을 잃게 되었다.

3. 주택개량사업과 생활환경의 변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농촌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다. ‘새마을운동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게 새마을 만들기로 회수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새벽잠을 깨우는 종소리와 함께 매일 전국의 모든 마을에 울려 퍼진 ‘새마을노래’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정희가 작사한 이 운동가에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이 가사처럼 새마을운동의 초기 사업은 마을의 환경개선에 그 무게중심이 놓여 있었다. 예컨대 마을의 안길과 농로 넓히기, 소하천과 하수구 정비, 공동퇴비장 설치, 마을 숲 조림, 주택개량, 전기보급과 간이급수시설 설치, 취락구조 개선 사업 등이다.

이 중에서 농촌의 풍경과 주생활을 일신한 주택개량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펼쳐졌다. 하나는 70년대 전반에 치중된 ‘초가집’의 부분개량이고, 또 하나는 중후반에 추진한 도시형 양옥의 신축이다. 우선 전자에서는 주로 지붕과 부엌을 개량의 대상으로 삼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지붕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벗짚으로 올린 재래의 지붕을 슬레이트나 합석, 혹은 기와지붕으로 교체하는 게 主 내용이었다. ‘초가집’의 지붕같이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벗짚을 새끼줄과 같은 糞工의 재료나 연료, 퇴비 등에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농가로서는 워낙 큰돈이 들기 때문에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약간의 금융지원과 함께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붕개량사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72년부터 78년까지 도합 260만 동의 지붕개량이 이루어졌고, 마을의 ‘초가집’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가난하고 낙후한 농촌’을 ‘경제적이고 근대화한 농촌’으로 탈바꿈시킨 선도적 사업으로서(새마을연구회 편, 1980: 483~485), 박정희 정권이 그 가시적 효과를 적극 활용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자료3(左): 초가지붕의 개량작업(전라북도 부안, 1972년),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에서 전재
 자료4(中): 슬레이트지붕(『뉴시스』 2011년 5월 25일 「슬레이트지붕 건물」기사에서 전재)
 사진5(右): 좌측 후면의 기와지붕과 우측 전면의 합석지붕(전라북도 순창, 2017년 6월 촬영)

그러면 위와 같은 지붕개량사업에 대해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일상생활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 이승훈의 연구가 주목에 값한다. 그에 따르면, 처음엔 지붕개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막상 ‘해놓고 보니 보기 좋았다’는 쪽으로 점차 생각이 바뀌어 갔다. 물

론 그 과정에서 불평불만을 흘리거나 비판적 언행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라기보다는 그 추진방식의 강제성을 비롯한 주택 자체의 불량과 부실공사,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지붕개량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슬레이트지붕과 합석지붕에 대한 반감 등이었다(이승훈, 2006: 244~247).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이 멋대로 남의 초가지붕에 올라가 갈고리로 지붕을 해집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붕개량을 밀어붙이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한 그러한 강압이나 과도한 독려는 마을주민들의 반감을 사기 일쑤였다(이환병, 2011: 192~194).



사진6(左): 개량형 평면도에 의해 1980년대의 농촌주택(전라북도 순창, 2017년 6월 촬영)
 사진7(右): 유리 미닫이문을 이용한 마루의 내부공간화(경상북도 신도 1리, 2017년 10월 촬영)

다음, 농촌주택의 근본적 개선을 목표로 1976년부터 79년까지 후자의 도시형 양육 건립이 추진되었다. 정부가 제공한 몇 가지 표준설계도에 따라 이른바 ‘문화주택’이 4년에 걸쳐 총 18만 5천 동 지어졌다. 이 수치는 당시 농촌의 전체 주택 가운데 약 7%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사용된 ‘표준주택 평면’은 80년대 이후의 ‘개량형 평면’의 근간이 되어, 오늘의 농촌주택의 모습을 결정지었다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이 컸다. 이승훈은 재래식 주택과 이 문화주택의 차이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재래의 홑집에서 겹집으로 살림집의 형태 변화, 전통적인 좌식생활의 부분적 입식화, 마루의 내부공간화와 각 방들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의 역할 전화이며, 이 삼자는 전형적인 도시형 주택으로의 변화에 다름 아니었다(이승훈, 2006: 247~250).

하지만 이 새로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성과는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미흡했다. 농민들의 의식 개혁, 소득증대, 도농격차 해소, 이농현상 억제 등과 같은 정책적 목표들이 그다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촌의 살림살이나 생활방식과 잘 어울리지 않는 도시형 문화주택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 사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정책적 목표와는 전혀 다른 마을주민의 그 수용방식을, 그는 ‘도시적 삶’을 향한 농민의 ‘과시적 효과’에서 찾고 있다. 즉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된 농민의 소외감, 도시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도시형 문화주택을 소유했다는 상징적 이미지로 극복하려는 욕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근년 농촌에서 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아파트’(남근우, 2015: 255)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바, 문화주택의 소유라는 주관적 성취감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성공으로 인식하게 된 주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승훈, 2006: 256~261).

4. ‘통일벼’의 기억과 그 수용의 지역차

70년대 당시 새마을운동은 흔히 ‘잘 살기 운동’이라 일컬어졌다. 앞서 언급한 새마을운동가에도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라는 구절이 보인다. 실제 이 ‘부자마을’을 향한 소득증대 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졌는데, 그 대표적인 보기로 통일벼의 증산정책을 들 수 있겠다. ‘통일벼’란, 농학자 허문회가 필리핀의 국제도작연구소에서 육성한 벼의 신품종 ‘통일’(IR667)과 그 후예들을 말한다. 인디카(Indica) 계열의 다수화 품종을 한국 풍토에 맞게 개발한 것으로, 한국에서 재배된 기왕의 것들보다 월등한 수확고를 올려, 한때 ‘기적의 벼씨’로도 불렸다.

박정희 정권은 1971년부터 정부조직을 총동원하여 그 종자 보급과 증산에 박차를 가해 나갔다. 그 결과 통일벼 재배는 해마다 급증하여 1978년에는 전체 논 면적의 76%에 이르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1989: 431). 이와 함께 전국의 쌀 수확량도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1976년 늦가을 유신정부는 주곡인 쌀의 자급을 선언했다. 그 ‘녹색혁명의 성취’를 축하하자는 뜻에서인지, 이듬해에는 14년 만에 쌀 막걸리의 제조도 허용되었다. 하지만 통일벼는 아직 인디카의 특성도 지니고 있어, 고래로 자포니카(Japonica) 계의 찰진 쌀을 선호해온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맛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일벼의 시장가격은 낮았고, 그 때문에 재배를 꺼리는 농민들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중곡가, 추곡수매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통일벼 위주의 증산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도열병의 만연과 냉해로 내리 3년이나 큰 피해를 입자, 농민들은 통일벼를 강제하는 정부 정책에 본격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유신체제를 이어받은 전두환 신군부는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벗어나, 통일벼의 증산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의 강제와 후원이 사라지자 통일벼의 재배 면적은 이내 반 토막이 났고, 1992년 추곡수매의 중단과 함께 통일벼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김태호, 2009).



자료5: 「앞당긴 ‘쌀 자급’에 드높은 풍년가: 통일벼로 사상 최고 3,242만섬」(『경향신문』 1975년 11월 12일)
 자료6: 「녹색혁명의 中核 범씨 개량 12年: 기적의 ‘통일’서 한숨의 ‘노풍’까지」(『동아일보』 1978년 9월 11일)

이처럼 통일벼의 짧지만 강렬한 성취, 그리고 그것에 얽힌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는 약 4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인의 뇌리에 선명히 남아있다. 적어도 50대 이상의 시골 출신들의 경우, 그 증산체제의 동원 과정에서 겪은 희로애락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 기억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통일벼 이야기’를 거칠게 정리하면, 유신시대를 바라보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다. 하나는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해결한 ‘녹색혁명’의 성공신화이며, 다른 하나는 유신정권이 자행한 강압농정의 재앙으로 기억하는 내러티브다.

그런데 김태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양자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통일벼가 중부 지방에서는 끝내 자리를 잡지 못한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받아들여졌고, 80년대 중 후반까지도 상당한 규모(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20~30%)로 재배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성공신화와 농정재앙의 그 어떤 내러티브로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김태호는 이 양자가 놓치고 있는 통일벼 수용의 지역적 차이를 천착하고, 나아가 '통일벼 이야기'가 그 후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요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통일벼는 남부지방에서는 압도적인 우세종이었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최 전성기인 70년대 후반의 두세 해를 빼고는, 자포니카 계의 대표종이었던 '아키바리(秋晴)'에 비해 확연히 열세였다. 그러면, 그 수용양상의 지역차는 왜 발생한 것일까? 우선 통일벼는 인디카 계의 아열대 품종의 출계였던 까닭에, 계절에 따른 한랭의 차이가 큰 한반도에서 그것을 재배하려면, '보온못자리'를 비롯한 많은 기술과 노력이 더 필요했다. 상대적으로 봄과 가을의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에서는 그나마 통일벼가 큰 문제없이 안착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중부지방으로의 보급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태환경적 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제지리적 요인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소비자들은 통일벼를 좋아하지 않았고, 따라서 '통일쌀'은 시장에서 자포니카 계의 쌀, 통상 '일반미'라 불리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이처럼 시장에서 통일벼가 외면당할 위기에 빠지자, 정부는 통일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도를 동원했다. 추곡을 사들일 때 통일벼를 우선 매입하고, 수매 등급도 올려주는 등의 여러 우대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중후반의 추곡수매는 거의 전량 통일벼로 충당되었다. 사실상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통일벼를 계약 재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종의 계약재배를 모든 농민이 환영했던 것은 아니다. 추곡수매 외에 다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정부의 추곡수매에 목을 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령 남부의 호남지방과 같은 곡창지대의 경우, 큰 소비시장이 주변에 없었고 또 일제시대 이래 쌀의 품질이 낮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멀리 있는 시장보다는 가까워서 각종 우대조치를 해주는 국가의 행정기구에 의존하는 게 여러 모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에 비해, 중부의 경기 지역의 경우는 서울이라는 가장 큰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었고, 이미 고급미의 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벼' 재배를 억제하는 정부보다는 아키바리에 높은 값을 쳐 주는 민간 도매상과 거래하는 편이 이득이었다.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고급 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70년대 말에는, 일부 대도시 미곡 도매상이 이른바 입도선 때 등을 통해 정부의 추곡수매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아키바리 재배를 유도하기도 했다. 중부지방에서 통일벼가 안착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경제지리적 요인이 컸다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벼 수용의 지역차는 당연히 그 기억에도 차이를 초래한다. 경기도의 경우, 한마디로 그것은 '통일벼에 시달렸지만, 결국 살아남아 융성한 아키바리'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이후 소비자들의 쌀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가령 80년대 한국에선 소득수준이 높아진 대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반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일반미의 으뜸은 단연 아키바리였다. 이 아키바리는 앞서 보았듯이 특히 경기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었던 까닭에, 소비자의 일반미 선호는 이내 경기미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기미 열풍'이 80년대 당시 아키바리라는 품종 자체가 다른 종류에 비해 뛰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가까운 과거의 기억에다 먼 과거의 이야기가 버무려진 의외의 결과였다. 여기서 '가까운 과거의 기억'이란, 물론 통일벼를 앞세운 증산체제에의 강압과 그것을 이겨낸 아키바리의 생존과 관련한다. 정부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기어이 아키바리를 심으려 들었다는 이야기는, 소비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아키바리의 우수함을 보증해주는 훈장이 되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이천과 여주의 이른바 '紫彩쌀'의 진상이라는 먼 과거 기록의 한줄기 光輝가

덧씌워져, 아키바리는 ‘임금님께 올린 경기미’라는 이름으로 그 입지를 급속히 넓혀갔다. 1995년 한국 최초의 브랜드 쌀이 시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임금님 쌀’의 라벨을 붙인 경기도 이천산의 아키바리였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아키바리와 그 개량종인 ‘새 秋晴’은 가장 인기 있는 쌀 중의 하나다.

한편, 경기미의 열풍이 거세질수록 남부의 호남미는 그 인기가 떨어져 갔다. 도시 소비자들이 ‘호남미는 통일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통일벼가 퇴장한 뒤에도 호남산 쌀은 시장에서 평가 절하되는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어야 했다. 실은 강압농정이 철폐된 80년대 이후, 전라도의 호남은 경기도 다음으로 아키바리를 널리 재배하는 지역이기도 했다. 하지만 호남미에 대한 편견 때문에 호남산 아키바리는 제값을 받지 못했다. 호남의 농민들이 90년대 초까지 통일벼를 계속 심었던 까닭은 이와 같은 호남 지역관 ‘통일벼의 기억’을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통일벼는 남부의 호남 곡창지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다수확을 올려주었다. 하지만 호남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시장 역시 조선총독부의 산미증산계획 이래 줄곧 호남미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호남의 농민들은 시장보다는 추곡수매라는 틀을 유지하는 국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 불가피한 선택이 ‘호남미=통일쌀’이라는 편견과 제약을 낳았던 것이다.

덧붙여, 쌀 시장이 품종보다는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된 현재, 그 브랜드화의 방향은 호남미와 경기미의 서로 다른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호남 산임을 전면에 내거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산지에 관한 정보를 가급적 줄이거나, ‘땅끝 마을’과 같이 모호하고 낭만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혹은 ‘히토메보레’와 같이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품종을 들여와, 산지보다는 품종의 명성에 기대 브랜드화를 피하기도 한다. 호남산 브랜드 쌀 중에서 시장에 고가로 안착한 ‘한눈에 반한 쌀’이 그 좋은 보기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기미는 브랜드 품종을 들여오는 경우에도 경기도산임을 강조한다. 가령 2007년에 출시한 ‘농심 고시히카리 쌀밥’은 즉석밥 시장에서 후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산 고시히카리 쌀’을 전면에 내세우는 승부수를 띄웠다. 광고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임금님 쌀의 본고장인 경기도’와 ‘일본 최고의 고시히카리’라는 두 브랜드에 힘입어, 시장진입에 대성공을 거뒀다.

이처럼 통일벼 이야기는 유신정부의 농정에 대한 평가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통일벼가 퇴장하고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에도 도시 소비자의 쌀에 대한 선호의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그것이 그 증산체제에의 동원 및 기억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벼의 기억은 과거사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구성하는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일상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김태호, 2016).

5. 가정의례의 재편과 균열

1970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1972년 유신체제의 성립 이후 다음의 삼대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즉 농촌의 ① 환경개선사업과 ②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③ 농민의 정신계발사업이다. 앞서 살펴본 주택개량과 통일벼의 증산은 각각 ①과 ②의 대표적 정책으로, 양자 모두 농촌의 생활변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거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박정희 신드롬’(정해구, 1998: 60~70)과 함께 성공한 ‘신화’로 인식되고 있는³ 것은, 특히 이 두 사업에 대한 강렬한 경험과 선명한 기억이 작동한 결과이겠다. 양자의 강압적인 추진으로 말미암아 농촌의 ‘낙후한 초가집’과 보릿고개의 굶주림이 사라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

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③과 관련하여 거론하고 싶은 게 ‘가정의례준칙’이다. ‘가정의례’란 글자 그대로 가정에서 행하는 의례, 이른바 관혼상제를 말한다. 그중 ‘혼상제’의 세 의례 절차의 간소화와 허례허식의 일소를 목적으로 1969년 그 기준과 형식 등을 법률로 규정, 반포한 게 가정의례준칙이다. 이 ‘준칙’의 규범적 통제와 법적 강제에 따른 ‘가정의례’의 재편에 관해선 종래 여러 연구 성과가 제시되었다. 가령 정책론의 관점에서 가정의례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거나, 문화론의 관점에서 동 준칙이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특징과 의미체계 분석, 그리고 그로 인한 가정의례와 사회의식의 변화를 추구한 성과들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대개 전통과 근대의 대립, 즉 전통적인 의례전승과 국가에 의한 법률적 통제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도에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김시덕, 2001; 오재환, 2001; 도민재, 2002). 이에 비해 고원의 경우, 전통과 근대의 대립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것의 내부에서 일어난 충돌을 대상화하고 있어 흥미롭다. 특히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분석하고 있어 주목에 값한다(고원, 2006b).

그것에 따르면, 우선 지식인들의 경우 사사로운 가정의례의 ‘준칙’ 제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나 반감이 많았다. 당시 박정화가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을 밀어붙이던 ‘위기’ 상황에서, 사생활의 간섭이나 침해의 위험성이 많은 동 준칙에 대해 경계심이 증폭된 결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정의례준칙을 법으로 하느냐, 준칙으로 하느냐를 놓고 여당의 공화당 정책심의회에서도 논란이 벌어졌는데, 결국 소장과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동 준칙을 실정법으로 규정하되 처벌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는 선에서 일단 절충적인 처리를 하게 된다.

다음, 농민들을 비롯한 일반 서민의 경우, 구래의 관혼상제 관행을 어쩔 수 없이 지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당시의 서민 대중들은 가정의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받고 있었고, 게다가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이미 전통적 생활상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의례준칙의 사회적 영향력이 헤게모니적 우위를 점유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배태된 ‘신식 허례’였다. 사회 “지도층이 잘 안 지키는 가정의례”(『조선일보』 1969년 4월 18일), “지도층에 강조되어야 할 가정의례준칙”(『조선일보』 1973년 6월 18일) 등의 신문기사에서 헤아릴 수 있듯이, 전통적인 전근대성의 유습으로 인한 허례허식 풍조는 줄어든 반면, 산업화로 성장한 새로운 상위계층이 주도하는 과시적 소비의 허례허식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1973년 유신체제의 성립 직후 가정의례준칙과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

새로 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준칙에서는 허례허식의 금지사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적 처벌조항을 도입한 게 가장 큰 변화였다. 이처럼 박 정권이 가정의례준칙을 개정, 강화한 것은 물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상위계층의 과시 소비욕에 의한 일탈행위에 주원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시소비 풍조를 엄단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까지 직접 강제력의 집행 범위를 확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결국 상류계층의 허례허식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지렛대로 가정의례준칙이라는 대중의 통제수단을 강화시켜 사회를 규율하기 위해서였다. 유신체제의 영구집권 구축을 위한 사회의 억압 강화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강제력을 장착한 이 새로운 가정의례준칙은 그 후 시행 과정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강제적 처벌조항은 교묘한 편법으로 무력화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가령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인쇄물에 의한 개별통지 금지는 친밀한 어투의 편지글, 곧 이른바 ‘자율서신’이나 구두연락, 전화통지, 신문 부고난 등의 전용으로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인쇄물에 의한 개별통지와 거의 동일한 관행이 지속되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부가 제시한 가정

의례준칙의 위반 기준에 불합리한 것이 많았다는 점이다. 가령 가정의례준칙의 강제규정을 끝이곧대로 적용할 경우 한 겨울 먼 시골까지 조문하러 온 문상객에게 간단한 음식물 한 그릇조차 대접을 할 수 없었다. 농촌의 인정상 이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것이며, 결국 가정의례준칙의 강제는 일반 서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만을 유발했다. 그리하여 그 시행 과정에서 위반사례의 적발은 많았지만 실제 처벌한 경우는 드물었다. 결과적으로 박 정권이 허례허식 배격을 명분으로 사회를 규율하고자 했던 의도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철될 수 없었다.

정작 사회 부조리의 온상이 된 것은 개정 법률에서 규정한 금지조항이 아니라 그 금지 규정을 받지 않는 새로운 과시소비의 풍조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는 고급호텔과 같은 럭셔리한 혼례식장을 이용한 결혼식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고, 역대를 넘는 토지와 자가용, 맨션 등의 호화 혼수가 오가는 결혼풍조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등장해 점차 그 밑의 계층으로 확산되어 갔다. 결혼이 공공연한 자산의 거래수단이 되고 직업적 투쟁이가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또 호화판 묘지가 사회문제로 등장했는데, 심지어는 무덤 안에 특수냉동시설을 하는 등의 현상까지 나타났다. 반면에 제사와 같은 것은 사회계층의 상하를 막론하고 간소화했는데, 이는 과시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의 추세에 맞춰 간편한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와중에 상위계층의 과시소비풍조는 더욱 확산되어 서민층으로까지 퍼져나갔다. 서민들은 상위계층의 문화행태에 대해 한편으로는 위화감이나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부러움과 체면의식에서 그들의 문화를 모방하고자 했다. 상위계층의 소비풍조가 이른바 상징자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해나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정의례의 법률과 준칙이 갖고 있는 불합리와 맹점을 빌미로, 전통과 관습을 법령으로 막는 행위의 부당함을 명분삼아, 박 정권의 가정의례준칙을 무력화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가정의례준칙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상황의 요인이나 배경을 이상하리만큼 전통과의 갈등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던바, 그러한 사회담론의 과잉된 유포 양상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박 정권이 허례허식 일소를 명분으로 1969년에 도입한 가정의례준칙은 한국 사회에서 그 당시까지도 전래되어오던 전통적 가정의례 풍속을 서양식의 신식 가정의례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 가정의례준칙은 국민들의 사생활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가정의 일상적 의례를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의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일반 서민 대중들로부터 일정한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 준칙을 통한 사회통제는 이윽고 서민들의 소박한 생활양식과의 갈등, 상위계층의 자본주의적 과시소비욕구에 의한 일탈이라는 이중의 저항 속에서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특히 산업화로 성장한 상위계층은 유신정부와 일반대중의 갈등을 활용하면서 정권의 사회통제를 무력화하며, 이른바 ‘구별 짓기’를 통해 계급적 상승에의 기대감, 상층계급문화에의 동화의 표현으로서 가정의례를 재구성하는 상징자본을 구축해갔다고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정의례준칙은 전통적인 혼상제례문화를 해체하여 근대적 일상성을 구성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동시에 근대성 내부의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 상당한 변용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의례준칙의 전개 과정은 서민 대중의 내핍과 근면을 바탕으로 압축성장의 근대화를 이룩한 발전 국가가 스스로 배태하고 육성한 계급집단에 의해 굴절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하겠다. 아울러 80년대 이후 발전주의 국가모델이 균열을 일으키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한국 사회 지배세력의 새로운 사회모델 및 지배 이데올로기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고원, 2006b).

6. 새마을운동과 일상연구

지금까지 이승훈과 김태호, 고원 등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에 따른 한국인의 일상과 생활변화의 일단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고원의 경우 일상생활 연구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을 몇 가지 명시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우선 하나는, 일상생활에의 접근이 사회를 공식 이데올로기로부터 해석하기보다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인식으로부터 이해하려는 시도라는 점이다.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방법과 미시적 접근 방법을 택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상생활 연구는 거시구조적 지표나 자료들이 사람들의 현실적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일상생활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지나치게 특권화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치 시대의 일상을 탐구한 포이케르트의 지적(D. Peukert, 2003: 10~11)처럼, 일상사 연구가 지엽적인 문제와 미시적인 그림 속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사의 전망이 생활세계적인 구조들의 복잡성에 대한 개념을 보유하고, 초지일관하는 목적지향의 분석적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고원, 2006b: 196~197).

또 하나, 고원은 ‘헤게모니적 권력전략’이라는 시각에서 새마을운동을 분석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그의 분석 지점은,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은 농민의 일상적 욕망’과 ‘농민을 경제적으로 동원하고 동시에 정권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국가 강제력의 작용’,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과 침투, 변용과 유용, 동의와 균열을 창출해 가는 복잡한 근대적 대중정치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농민의 일상 속에 특정한 생활규범을 침투시키고자 한 ‘농민생활의 근대적 규율화’ 운동이자, 그것을 통해 농민을 ‘국민’으로 호명하고자 한 헤게모니적 권력전략으로 전화된다는 것이다(고원, 2006a: 178).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그 ‘근대적 국민 만들기’에서 위의 지배 블록만이 동의와 설득을 통해 헤게모니를 획득해 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의 농민들 역시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짐짓 지연과 거짓 순응, 불평과 불만, 반발과 저항 등과 같은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들의 작은 ‘일상적 욕망’을 실천해 간다는 점이다. 농촌사회와 농민생활의 유의미한 변환란, 대개 이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실천의 접합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그리고 이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왕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은 이윽고 ‘변해가는 일상’으로 전환되게 마련이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대상화하려는 이 일상은 물론 ‘날마다 되풀이되는 생활’이나 동아시아에서 고래로부터 널리 사용해진 ‘풍속’과 같은 통상의 의미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근대의 경험과 생활을 재조직하는 영역으로, 새로운 근대성의 역사가 펼쳐지는”(Harootunian, 2000: 69~70) 시공간에 다름 아니다.

최근의 새마을운동 연구가 강조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시각’이나 ‘일상연구의 관점’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시공간에서 펼쳐진 주체들의 미시적인 생활실천의 탐구를 지향한다. 종래의 “능동적 국가와 수동적 개인”이라는 새마을운동론의 대전제를 지양하고, “구조적 시각과 일상의 다양한 사실들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승훈, 2006: 237~238)를 추구함으로써, “민중들의 생활세계와 경험세계에 접맥되는 새마을운동”(김영미, 2009: 11)을 역사화하려는 시도다. 주로 역사학과 사회학이 주도하고 있는 이 일상연구에서는 정부나 언론매체가 생산한 각종 문서나 자료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물론, 과거 새마을운동이 펼쳐졌던 마을 현장의 필드 워크도 행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발굴된 농민들의 수기나 일기 등의 분석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경험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병행되고 있어, 그 점 민속학의 현장연구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상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아직 소수의 연구자들에 국한되어 있다. 게다가 그것은 “일상에 미친 국가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분석하려는 입장이 강하며, 따라서 “일상 자체의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공제욱 편, 2008: 4)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모처럼의 인터뷰 자료가

주로 문헌자료를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어 문제다. 무엇보다 ‘체험된 생애사’와 ‘이야기된 생애사’의 명확한 구분과 재구성이라는 방법론(이희영, 2015: 133~143)의 자각 없이, 그 자료화와 해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이지만, 그간 한국민속학이 도외시해 온 새마을운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일상 연구를 실행하고 있는 점은 정말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행히도 내년 2월 한국 실천민속학회에서도 「근대화와 ‘민속’ 연구」를 기획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바, 이번 학술회의의 일상 연구 성과가 확산, 심화되기를 삼가 바라마지 않는다.

注

- 1 1969년에 임동권이 중심이 되어 ‘한국민속학연구회’를 결성하고 그 해 12월 기관지 『한국민속학』을 창간한다. 그리고 이듬해에 동 연구회의 이름을 바꾸는데, 최상수의 주도 아래 1954년에 창립된 ‘한국민속학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민속학회’로 개칭한다. 이 두 학회를 2000년에 통합한 게 오늘의 ‘한국민속학회’다.
- 2 김태곤이 소장을 맡은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가 1971년부터 73년 사이에 주최한 것으로 「민속학의 현대적 방향」과 「민속학의 전환적 과제」, 「민속학의 대상」, 「민속학의 방법」을 차례대로 주제로 삼았다. 그 성과를 엮어낸 게 『한국민속학: 원론적 대화』(원광대학교 출판국, 1973년)이다.
- 3 가령 1998년 조선일보사와 한국객원이 공동으로 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은 새마을운동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올림픽 개최, 경부고속도로 건설, 광주 민주화운동이 2·4위를 차지했다. 2008년에도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동일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는 역시 새마을운동이었다. 자세한 것은 『조선일보』 1998년 7월 15일자와 2008년 3월 15일자 참조.

참고문헌

- 고원, 「박정희 정권 시기 농촌 새마을운동과 ‘근대적 국민 만들기」, 『경제와 사회』 69, 비판사회학회, 2006a.
- _____, 「박정희정권 시기 가정의례준칙과 근대화의 변용에 관한 연구」, 『담론 201』 9-3,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b.
- 공제욱 편,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
- 김시덕,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 김태호, 「‘통일벼’와 증산체계의 성쇠: 19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과학기술사적 접근」, 『역사와 현실』 74, 한국역사연구회, 2009.
- _____, 「통일벼의 기억과 ‘임금님 쌀’의 역사 만들기」, 『사람』 57, 수선사학회, 2016.
- 남근우, 「‘민속’의 근대, 탈근대의 민속학」, 『한국민속학』 38, 한국민속학회, 2003.
- _____, 「누구의 무엇을 위한 ‘실용’인가?: 한국민속학의 실천성 재고」, 『민속학연구』 33, 국립민속박물관, 2013.
- _____, 「서울 고층집합주택의 전개와 아파트 살림살이」, 『일상과 문화』 1, 일상과 문화 연구회, 2015.
- 도민재, 「사회 변화에 따른 제례의 제 문제」, 『유교사상연구』 16, 한국유교학회, 2002.
- 민속학회 편, 「민속학 전국대회 토론회」, 『한국민속학』 5, 민속학회, 1972.
- 박진도·한도현, 「새마을운동과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농촌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47, 역사비평사, 1999.
- 새마을연구회 편, 『새마을운동 10년사』, 내무부, 1980.
- 오재환,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의례문화의 변화」, 『사회조사연구』 16, 부산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 이승훈, 「1970년대 농촌주택개발사업」, 『정신문화연구』 29-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 이환병, 「모범농민·마을의 성장과 농촌 새마을운동」,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 _____, 「1960년대 마을 개발과 농촌 새마을운동의 초기 전개과정」, 『역사연구』 23, 역사학연구소, 2012.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한국사회학회, 2005.
- 정해구, 「박정희 신드롬의 양상과 성격」, 『박정희를 넘어서: 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연구』, 푸른숲, 1998.

최길성, 『미신타파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속학』 7, 민속학회, 1974.

포이케르트(Detlev Peukert), 김학이 역, 『나치시대의 일상사: 순응, 저항, 인종주의』, 개마고원, 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한국농정40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Harootunian, Harry, *Overcome by Modernity: History, Culture and Community in Interwar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